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움직임 확산

“무분별한 환경 훼손”

조계종 환경위원회

교구본사 사회국장단

영축활동 동참 성명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교구본사 사회국장 스님들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스님)는 지난 9일 ‘울산시와 울주군은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중지하고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

하는 영축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혔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은 전형적 지방환경 파괴 및 시민 예산을 낭비하는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과 낙동정맥 지역으로서 영남 알프스 일원의 중요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는 신불산에 철제 쇠기둥 수십 톤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지역을 관리해야 할 해당 지자체에서 보호지역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환경위는 △자연공원과 낙동정맥을 파괴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 △임지 타당성과 재정 평가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상류정류장 변경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다시 검토할 것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정과 생태조사 외곡 및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 △추후 케이블카 사업 진행시 담당 공무원들의 사후 책임과 배상을 명문화하는 정책실명제 추진할 것과 시민환경단체와 통도사 등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것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

전담부서로의 사명감을 갖고 관련규정(로프웨이 및 백두대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엄정한 적용과 영남알프스 지역 보존을 위한 사전예방조치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환경위는 울산시와 울주군에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며 울산시청부터 울주군청까지 ‘신불산과 영남 알프스를 지키기 위한 시민합계 걷기’를 진행했다.

조계종 교구본사 사회국장단 또한 같은 날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반대’ 성명서를 내고 “울산시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생태가 우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불산 자연공원에 환경보존 및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 없이 케이블카 설치

를 강행하려 한다”며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가 민족정기 말살을 위해 박았던)신불산 철심을 뽑아냈던 울산시에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수십 톤의 철제 건물과 지주대 등을 세워 신불산을 다시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악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공으로 추진,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부터 신불산 정상까지 2.46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최대 600억원이 투입돼 이르면 오는 2017년 하반기 마무리된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대승보살의 적극적 자비행 서원

오게 팔재계와 함께 재가불자가 지녀야 할 계

■ 십선계는…

오는 18일 종단 최초로 전개 대화상이 신도 최고 법계 선혜(善慧) 품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할 십선계(十善戒)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승보살의 적극적인 자비행인 십선업도(十善業道)를 행하는 것을 계율로 삼은 것이 바로 십선계(十善戒)다. 오계(五戒)와 팔재계(八齋戒) 등과 함께 재가자가 지녀야 할 계로 손꼽히는 십선계는 <지도론(智度論)>에서 설하는 계로써 몸가짐(身)과 말씨(口)와 마음씨(意)를 올바르게 할 것을 규제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원래 초기불교에서는 ‘계’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선한 열가지 행동 기준, 즉 선과 악의 판단기준이었다.

십선계는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不殺生)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不偷盜) △남녀의 도를 문란케 하지 말라(不邪淫)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해치거나 속이는 말을 꾸미지 말라(不綺語) △협담을 하지 말라(不惡口) △공동체 사람들 사이 이간질을 하지 말라(不兩舌) △탐욕스러운 행위를 하지 말라(不貪欲) △화를 내지 말라(不瞋恚) △그릇된 견해를 가지지 말라(不邪見) 등이다.

이 가운데 몸에 관한 계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등 3가지이며, 입에 관한 계가 불망어, 불기어, 불악구, 불양설 등 4가지다. 또한 마음에 관한 계가 불탐욕, 불진에, 불사견 등 3가지다. 이처럼 십선계는 신구의(身口意) 삼업에 걸친 청정함을 실천하는 점에서 체계적인 가르침으로 손꼽히고 있다.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스님은 “불자라면 누구나 오계를 수지하고 있듯이 모범을 보여야 할 재가지도자라면 자기 본분에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부처님처럼 살 것을 서원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신도 최고 품계인 선혜 품계수지자로서 이같은 십선계를 잘 지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동국대로 간 만해마을 그 후



인적수 기자의
현장에서

jsahn@ibulgyo.com

3년 전,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이끌고 있는 무산스님을 만났다. 당시 스님은 만해마을을 불교계 단체에 기증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단체 숙박시설인 금강관과 설악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이 인제군이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인제군 발전을 위해, 또 민족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해 건립한 시설이 만해마을이다. 또 만해스님의 문학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무산스님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만해마을의 건립이었다.

만해마을은 2003년 완공 이후 문인들이 줄지어 찾는 시설이 됐다. 매년 여름이면 만해축전을 위해 전국의 문인들이 몰려들었고, 평상시에는 문인들의 창작실로 개방됐다. 문인들이 무료로 숙식하면서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종교를 뛰어넘어 시인, 수필가, 소설가 등이 만해마을을 찾았고, 불교와 불교문학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문학창작실 활동에 대한 호응이 높자 서울을 비롯해 몇몇 지방자치

단체, 개인이 문학창작실을 세우고 현재 문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무산스님은 당시 “어느 기관이 맡든지, 문인을 위한 공간은 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2013년 만해마을이 동국대학교에 기증됐다. 그리고 문인들이 장기투숙할 경우 하루 5만원의 비용을 책정했다. 식비를 포함한 가격인데 여행객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이 아니다. 하지만 수임원이 별도로 없는 문인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가격이다.

만해마을을 건립한 정신이 무엇이었을까 되돌아 봐야 한다. 설악산과 내리천의 자연속에서 세계인이 감탄할 문학작품을 만들어 낸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 노벨문학상이 그곳에서 집필된다면 만해마을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유럽의 주요 관광지에는 문인들의 집필실이 꼭 들어가 있다.

아쉬움은 또 있다. 만해마을 홈페이지에 가면 만해마을 소개란에 무산스님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등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동국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몇몇 블로그에는 그렇게 여행후기가 기록돼 있다. 잘못된 역사만 기록하는 것만 역사왜곡이 아니라 기록해야 할 역사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도 역사왜곡이다. 아쉽다.



지난 8일 중헌개정안 인준을 안건으로 열린 제48차 회의에서 원로의원 스님들이 개정안 인준을 보류했다.

“미등록 사암 권리제한 문구 명확히”

‘원로회의’ 명칭 존치
중헌개정안 인준 보류

원로회의가 제201회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중헌개정안 인준을 보류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는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원로회의에는 의장 밀운스님, 부의장 원병·명선스님, 의원 도문·월서·혜승·현해·범흥·월파·종하·월탄·정관·암도·세민·지성·대원·성과·성우·원경스님 등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로의원 스님들은 중헌개정안 인준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중헌개정안은 △종정 자격조건

가운데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원로회의를 원로회로 변경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 제한 대상자와 내용을 종법으로 규정 △총립 방장의 중임 금지 △조심료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정심사위원장 등을 중앙총회에서 선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원로의원 스님들은 중앙총회에 개정안 문구를 명확히 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님들은 미등록 사설사암과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내용을 규정한 9조3항 ‘중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는 문구와 종단 등록 사설사암 창건주의 권리 승계를 보장한 94조4항 ‘사설사암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는 문구를 각각 ‘권리를 제한한다’와 ‘사자상승함을 인정한다’로 해야 한다며 중헌개정안 제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의 명칭을 원로회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행대로 원로회의로 존치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장 범등스님이 위원회 출범 이후 활동에 대해 보고한 뒤,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원로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준비 현황, 종교교육 시설부지로 무단점유한 국유림을 대부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국유림의 경역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중무보고도 진행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민추본 광복 70주년
‘통일부 차관과 대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복 70주년을 맞아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가 오는 20일 오후7시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광복 70년 특집, 통일부 차관과의 대화’를 주제로 14차 월례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정부 대북정책과 통일부 사업에 대해 강연한다. 강연 이후에는 황 차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통일에 대한 정부 입장과 남북교류의 활성화 가능성 등에 대한 궁금증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민추본 관계자는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기존 강의와 달리 처음으로 정부 관계자를 초청했다”며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부 사업에 대한 차관의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 모두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차후에는 민간 쪽에서 대북사업과 통일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실무자를 초청해 대북 민간지원의 역사 및 민간단체 활동내용과 어려움 등에 대해 듣는 시간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4월7일 중무회의)

지암스님
고흥 성불사

청화스님
서울 법성사

통일시대의 준비 봉 국민적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 토론회 행

기록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지난해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이하 ‘평화기획단’)은 보수와 진보 양측 진영의 인사들과 국제 전문가들을 두루 초청하여 통일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남북한 등 6자회담 당사자국 및 세계정세에 밝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련 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좌담회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바, 이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불교계의 역할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여서 역사적인 의미가 남다릅니다. 평화기획단은 더욱 힘을 내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오는 4월 28일에 ‘통일시대의 준비 - 국민적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시민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번 토론회에 대한 대중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2559(2015)년 4월 15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상임단장 법응 합장

토론회 진행 사항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4월 28일(화) 09:45~17:40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 제

1. 통일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남북한의 역할
2.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고찰
3. 평화통일을 위한 불교계 및 국민공감 방안 및 과제

/발제 및 토론

-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박순성(동국대학교 교수)
- 송주명(한신대학교 교수)
- 이수훈(경남대학교 교수)
-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김근식(경남대학교 교수)
- 한정숙(서울대학교 교수)
- 김홍규(아주대학교 교수)
- 이상근(국립한경대학교 교수)
- 고유환(동국대학교 교수)

-무순

사무처장 : 이원영(수원대 교수 / 010-4234-2143 / leewysu@gmail.com)